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영¹⁾ 최은영²⁾

요약

본 연구는 2009년 12월에 발표된 유아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국의 유아교육전문직 147명, 유치원장 520명, 유치원교사 1,812명, 유치원 학부모 936명을 대상으로 선진화 추진 계획의 적합성, 달성도, 효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선진화 정책이 유아교육 질 제고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가장 필요도가 높은 과제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와 '유아대상 영어학원 탈법단속 제도 개선'이며, 달성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의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과제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유아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유아교육정책, 유아교육 선진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기는 인적자원투자 대비 편익 비율이 가장 큰 시기로 선진국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를 개편하고, 유아기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3세

* 본 논문은 2011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임.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부터 유아교육에 편입 중이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그 대상을 2세 이하로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보육 간 중복된 기능을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거나 연령별로 이원화하여 조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련 제도나 인프라 등이 미흡하고 재정지원도 부족한 편이다. OECD는 3~5세 취원율을 2010년까지 9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권고(OECD, 2006)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유치원 취원율 41.1%(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와 만 3, 4, 5세의 보육시설 이용률 45.3%를 합하면 86.4% 수준으로 점차 근접하고는 있으나, 아직 권고 비율을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교육계 내부에서도 초·중등 부문에 중점 지원을 함으로써 유아교육 분야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보편화하고자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결정하였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의 한계로 지적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할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7월에 유아교육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약 4개월간 운영하였다. 유아교육 선진화 T/F는 학계의 유아교육 전문가, 공사립 유치원 대표, 교육행정가, 관련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치원 설립·경영 개선과 유치원 교육력 제고의 2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전 작업을 토대로 지난 2009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교육과학기술부, '09. 12. 8 보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조성사업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유치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육력 제고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된 지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동안 유아교육정책의 성과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별로 없으나, 최근 유아교육정책 실태와 성과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유아교육정

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한 연구는 나정(2009)의 ‘저소득층가정 유아교육기회 지원정책 검토’, 유희정·이경숙·최진(2008)의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실태와 효과 분석’, 박찬옥·조형숙·엄은나(2008)의 ‘한국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탐색’, 윤건호(2003)의 ‘유아교육정책 평가연구: 직무영역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나정(2009)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저소득층가정 유아교육기회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정책 목표의 타당성, 정책 수단의 적합성, 정책 대상 선정기준의 합리성, 지원 금액의 적절성, 정책의 일관성을 검토하였으며, 유희정 등(2008)은 육아지원정책의 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결과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박찬옥 등(2008)은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논의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교육프로그램, 교사, 물리적 환경,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이라고 하였고, 통합적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구현, 유아교사의 전문성 신장, 공교육 제도의 확립 등이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윤건호(2003)는 유아교육정책 평가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관련 교사들의 직무관련 영역인 동료교사, 근무환경, 보수, 직무자체, 행정제도, 원장과의 관계의 6개 영역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 정책에 대한 성과 측정은 전체적인 국가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기보다는 개별 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정책이 학생들의 인지발달에 미친 효과, 혹은 특정한 정책이 학교차원의 성과에 미친 효과 등 상당히 구체적인 성과를 분석한다. 국가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 중 EHSRE(Early Head Start Research and Evaluation Project)는 조기헤드스타트의 효과, 효율성, 실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영향평가, 실행연구, 사례 연구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헤드스타트와 Pre-K의 질과 성과를 비교한 연구(Henry, Gordon, & Rickman, 2006), 유치원의 유급 정책(Kindergarten Retention Policy)이 아동의 읽기와 수학에서의 인지발달에 미친 효과 분석 연구(Hong & Raudenbush, 2005), 학교개혁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평가한 연구(May & Supovitz, 2006), 학교 개혁을 위한 자가 진단 지표를 제공한 연구(Hassel, 2002), 학교 개혁을 촉진 혹은 방해했던 주정부 혹은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적용성과 학업성취도의 측면에서 평가한 연구(Dantnow, Borman, Stringfield, Overman, & Castellano, 2003) 등이 있다.

이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의 유아교육정책의 성과 연구는 극소수이며, 특정 주제에 따라 하나 혹은 소수의 정책을 검토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외국에서도 성과 측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정책의 포괄적인 청사진이라 볼 수 있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 나타난 5개 영역 2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최근 유아교육정책의 성과를 제시하고 향후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2.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³⁾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라는 비전과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아교육 서비스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점진적 추진, 지원과 책무성의 조화를 세부 추진전략으로 하여,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배치·활용, 유아교육지원체계 강화의 5개 정책분야에 대해 각각 5개씩 총 25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주요 정책분야 및 핵심과제

정책 분야	핵심 과제
1. 유아학비 부담 경감	①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②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③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④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⑤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
2.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①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②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③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④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⑤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
3.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①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②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③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④ 지역단위 공·사립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 ⑤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

3)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12월 8일 발표 보도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표 1 계속)

정책 분야	핵심 과제
4. 우수 교원 배치·활용	①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 ③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④ 우수 교사 발굴·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⑤ 공립원장 평가·공모제 도입
5.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③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 ④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⑤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사립·직장부설유치원 육성 등이 핵심적으로 추진된다. 도시지역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적정규모로 통합 운영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지원과 투명성 및 책무성을 연계하여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기관 내에 부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직장부설유치원 설립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 이상 유아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를 지원한다.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에서는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기회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도입·운영한다. 이 밖에 유치원 평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에서는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본과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유치원 과정은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으로, 종일제는 방과 후 개념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 종일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지역 유아교

육 협력네트워크'를 육성·지원한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모형을 개발하여 유아교육에 활용한다.

우수교원 배치 및 활용 분야에서는 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양성·임용·연수·평가·보상 등 교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치원 교원에게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우수교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단기대체교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공립유치원장 평가와 공모제 도입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유아교육 지원 인프라를 세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유치원 및 유아교육의 정보화를 위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는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시·도 및 지역단위 유아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유아교육을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육성,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한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유아들이 누구나, 어디에서나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교원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세계 수준의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이라는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이상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178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과 전국 유치원의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9월 28일~10월 18일에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아교육전문직 147명, 유치원장 520명, 유치원교사 1,812명, 유치원 학부모 93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각 유치원별로 3~6명씩을 추천받아 연구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교육전문직/학부모 응답자 배경

단위: %(명)

교육전문직	계(n=147)	학부모	계(n=936)
성별		성별	
남	12.9	남	9.7
여	87.1	여	90.3
소속기관		교육정도	
시·도 교육청	21.8	중졸이하	2.5
지역교육지원청	78.2	고졸	13.8
직위		전문대졸	27.7
장학관	6.8	대졸	48.6
장학사	88.4	대학원졸	9.4
기타	4.8		
전문직 경력		가계소득	
5년미만	72.8	200만 원이하	7.4
5-10년미만	18.4	200-300만 원미만	24.7
10년이상	8.8	300-400만 원미만	30.8
유아교육 경력		400-500만 원미만	21.1
5년미만	36.7	500-600만 원미만	7.5
5-10년 미만	8.2	600만 원이상	8.7
10년 이상	55.1		
근무지역		자녀유치원소재지	
대도시	27.9	대도시	40.7
중소도시	37.4	중소도시	39.5
읍면	34.7	읍면	19.8
연령		연령	
20대	1.4	20대	1.9
30대	2.0	30대	72.9
40대	50.3	40대	25.0
50대	46.3	50대	0.1
60대이상	0.0	60대이상	0.1

〈표 3〉 원장/교사 응답자 배경

단위: %(명)

원장	계(n=520)	교사	계(n=1812)
성별		성별	
남	27.3	남	0.4
여	72.7	여	99.6
직위		직위	
원장	55.6	주임(부장)교사	17.7
원감	44.4	담임교사	78.4
		기타	3.9

(표 3 계속)

원장	계(n=520)	교사	계(n=1812)
설립유형		설립유형	
국립	0.6	국립	0.9
공립단설	11.7	공립단설	7.8
공립병설	44.4	공립병설	67.8
사립법인	11.4	사립법인	9.2
사립사인	31.9	사립사인	14.4
유치원재직경력		유치원재직경력	
10년미만	30.4	3년미만	12.4
10-20년미만	25.0	3-6년미만	19.7
20년이상	44.6	6-10년미만	19.3
원장(감)경력		10-20년미만	21.5
5년미만	53.1	20-30년미만	26.8
5-10년미만	25.8	30년이상	0.5
10년이상	21.2		
연령		연령	
20대	0.0	20대	24.1
30대	8.7	30대	36.3
40대	27.1	40대	34.7
50대	55.0	50대	4.8
60대이상	9.2	60대이상	0.1
근무지역		근무지역	
대도시	42.9	대도시	35.6
중소도시	32.5	중소도시	35.9
읍면	24.6	읍면	28.6

2. 연구 도구

유아교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틀로서 정책평가 관련 선행연구(강영욱, 2004; 민병제, 2002; 안선희, 2009; 유은수, 2008)의 정책평가 모형을 참고하되, 안선희(2009)의 모형을 주로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에 대한 평가준거 및 방법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평가는 정책 형성의 단계에서부터 정책영향의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책을 평가하지만, 본 연구는 정책평가 연구라기보다는 정책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성과를 제시하는 연구로 정책 형성의 단계에서부터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형성의 단계를 제외하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적합성과 정책 영향 단계에서의 달성도와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설문조사에 반

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책 집행 단계의 핵심적인 평가 준거는 적합성이다. 적합성은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가운데 사회적·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혹은 실현 가능한 가치가 정책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안선희, 2010). 따라서 정책 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목표의 명료성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정책영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준거로서의 효과성은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의미하며,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데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2003)이 된다.

〈표 4〉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에 대한 평가준거 및 방법

단계	대상	평가 준거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정책 집행 단계	집행 계획 내용	적합성	- 정책 내용의 적합성 (정책집행계획의 충실성, 추진체계의 적합성)	설문조사
정책 영향 단계	정책 결과	달성도	- 유아학비 부담 경감의 달성도 -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의 달성도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의 달성도 - 우수 교원 배치·활용의 달성도 -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의 달성도	설문조사
	태도 변화	효과성	- 유아학비 부담 경감의 효과성 -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의 효과성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 - 우수 교원 배치·활용의 효과성 -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의 효과성	설문조사

이상의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에 대한 평가준거 및 방법에 근거하여 연구진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유아교육전문직 3인, 유아교육전문가 3인, 현장전문가 1인 총 7인에게 서면 자문을 받아 수정한 후, 28인의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내용			
		교육전문직	원장	교사	학부모
배경	개 인	성별, 연령, 직위, 전문직 경력, 유아교육 경력	성별, 연령, 재직경력, 원장경력	성별, 연령, 재직경력, 담당 학급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계소득, 자녀 수

(표 5 계속)

구분		문항내용			
		교육전문직	원장	교사	학부모
배경 변인	기관	교육청 소재지	설립유형, 유치원 소재지, 규모, 운영시간	설립유형, 유치원 소재지, 규모, 운영시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설립유형, 소재지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목표의 명료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내용의 명확성과 적합성, 방향의 적합성, 전달과정의 체계성, 효과성, 핵심과제의 필요도와 정책 효과	효과 기대, 핵심과제의 필요도와 만족도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Window용)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배경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설문지 문항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F검증에서는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적합성 평가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적합성을 계획의 충실성, 추진체계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선진화 추진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선진화 추진 계획의 목표가 명료하다’에 대해서는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1%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진화 추진 계획 내용이 명확하다’에 대해서는 72.8%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선진화 추진 계획 내용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하다’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76.2%로 나타났으며, ‘선진화 정책 방향이 올바르다’는 그렇다는 응답이 70.0%로 긍정

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에 ‘선진화 사업의 정책전달과정이 체계적이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의 부정적인 응답이 59.0%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6〉 선진화 추진 계획의 적절성 평가(교육전문직)

단위: %(명), 점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M(SD)
추진 계획 목표 명료함	1.4	13.6	70.1	15.0	100.0(147)	2.99(0.59)
추진 계획 내용 명확함	2.0	25.2	69.4	3.4	100.0(147)	2.74(0.55)
추진 계획 내용이 정책 목표 달성 적합함	0.7	23.1	72.8	3.4	100.0(147)	2.79(0.50)
정책 방향 올바름	4.1	25.9	64.6	5.4	100.0(147)	2.71(0.63)
정책전달과정이 체계적	6.8	52.4	40.1	0.7	100.0(147)	2.35(0.62)

다음으로 선진화 추진 계획이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효과적인지를 평가해 달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은 4점 만점에 2.97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효과적이다(효과적임 있음+매우 효과적임)는 긍정적인 응답이 87.2%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표 7〉 선진화 추진 계획의 유아교육 질 제고에의 효과성 평가(교육전문직)

단위: %(명), 점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효과적임	매우 효과적임	계	평균(SD)
효과성	0.7	11.6	77.6	10.2	100.0(147)	2.97(0.63)

선진화 추진 계획의 하위정책들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아학비 부담 경감’은 약 74.8%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은 64.0%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는 각각 55.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우수교원 배치·활용’에 대해서는 53.1%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8〉 선진화 추진 계획의 하위정책 실현가능성(교육전문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계	평균(SD)
유아학비 부담 경감	2.7	22.4	62.6	12.2	100.0(147)	2.84(0.66)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7.5	37.4	46.3	8.8	100.0(147)	2.56(0.76)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4.1	32.0	55.8	8.2	100.0(147)	2.68(0.68)
우수교원 배치·활용	4.8	48.3	42.2	4.8	100.0(147)	2.47(0.67)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8.2	36.7	47.6	7.5	100.0(147)	2.54(0.75)

선진화 추진 정책이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교육전문직과 원장은 어느 정도는 목표에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원장의 평가가 높았다. 교사와 학부모 또한 선진화정책이 각각의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응답하여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교사의 평가가 높았다.

〈표 9〉 선진화 추진 정책 목표 달성도와 기여도 평가

단위: 점

구분	목표 달성도		기여도	
	전문직 달성도 평가(n=147)	원장 달성도 평가(n=520)	교사 기여도 평가(n=1,820)	학부모 기여도 평가(n=936)
	M(SD)	M(SD)	M(SD)	M(SD)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2.69(0.59)	2.77(0.59)	2.84(0.58)	2.79(0.63)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2.59(0.64)	2.62(0.63)	2.70(0.64)	2.64(0.68)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	2.50(0.67)	2.66(0.62)	2.74(0.63)	2.71(0.67)

2.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분야별 평가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5개 분야별 평가를 정책에 대한 필요도, 정책 결과에 대한 달성도와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에 대한 필요도, 계획달성도, 정책효과에 대해 각 대상별로 질문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와 '기업체 부설 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달성도와 정책효과는 물어보지 않고, 사업의 필요도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 전체에 대한 필요도는 3.40점, 계획대비 달성도는 2.56점, 정책효과는 2.90점으로 필요도에 비해 달성도와 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필요성 인식에 있어, 교육전문직, 교사, 학부모의 점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원장이 가장 낮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에 있어서는 대상별 차이가 없었으며,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세부사업별 필요도는 4점 만점에 2.98~3.66점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대상 영어 학원 탈법단속 및 제도개선'이 가장 필요도가 높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는 2.14~2.97로 세부사업별로 별로 달성하지 못했거나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대상 영어 학원 탈법단속 및 제도개선'은 별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의 필요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립유치원 확충 적정규모 육성'은 전체 3.46점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대상별로는 교육전문직이 3.69점으로 원장, 교사, 학부모보다 높은 편이었다.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는 전체 3.22점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상별 비교에서는 교육전문직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업체 부설 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는 전체 2.98점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학부모가 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원장의 평가가 2.74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는 전체 3.66점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대상별로는 원장, 교사, 학부모가 3.64~3.6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전문직이 3.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 탈법단속 및 제도개선'은 전체 3.66점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교육전문직, 교사, 학부모가 3.71~3.7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부모가 3.52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세부사업별 계획 대비 달성도는 4점 만점에 2.58~2.97점으로 어느 정도 달성한 편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공립유치원 확충 적정규모 육성'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58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원장에 비해 교육전문직의 점수가 낮았다.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97점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상별 차이는 없었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 탈법단속 및 제도개선'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68점이었으며, 대상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 평가

단위: 점

과제		공립 유치원 확충 적정규모 육성	사립 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기업체 부설 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유아무상 교육 단계적 확대	유아대상 영어학원 탈법단속 제도개선	전체
필요도	교육전문직	3.69 ^a	3.37 ^a	2.90 ^b	3.50 ^b	3.74 ^a	3.44 ^a
	원장	2.93 ^b	3.17 ^b	2.74 ^c	3.66 ^a	3.72 ^a	3.24 ^b
	교사	3.57 ^b	3.23 ^b	2.94 ^b	3.68 ^a	3.71 ^a	3.43 ^a
	학부모	3.50 ^c	3.20 ^b	3.20 ^a	3.64 ^a	3.52 ^b	3.41 ^a
	계	3.46	3.22	2.98	3.66	3.66	3.40
<i>F</i>		108.08***	3.52*	45.64***	5.43***	27.31***	27.02***
계획 달성도	교육전문직	2.33			3.01	2.22	2.52
	원장	2.65	비해당	비해당	2.96	2.12	2.58
	계	2.58			2.97	2.14	2.56
<i>t</i>		22.27***	-	-	1.02	1.80	1.09
정책 효과	교육전문직	2.78 ^b			3.03 ^b	2.56 ^b	2.79 ^b
	원장	2.80 ^b			3.23 ^a	2.45 ^b	2.83 ^b
	교사	2.99 ^a	비해당	비해당	3.28 ^a	2.80 ^a	3.02 ^a
	학부모	2.70 ^b			2.84 ^c	2.59 ^b	2.71 ^b
	계	2.87			3.14	2.68	2.90
<i>F</i>		20.32***	-	-	68.39***	17.40***	36.58***

주: a, b, c, 집단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01$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정책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립유치원 확충 적정규모 육성'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87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교사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3.14점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와 원장의 평가가 각각 3.28점, 3.2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부모의 평가가 2.84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 탈법단속 및 제도개선'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6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교사의 평가가 2.80점으로 가장 높았다.

나.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에 대한 필요도, 계획달성도, 정책효과에 대해 각 대상별로 질문하였다. ‘유치원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은 2011년 9월 현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필요도와 계획에 따른 달성도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전체 분야의 필요도는 3.01점, 계획 대비 달성도는 2.55점, 정책효과는 2.90점으로 필요도에 비해 달성도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필요성 인식에 있어, 교육전문직의 인식이 가장 높고, 원장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에 있어서는 대상별 차이가 없었으며,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있다고 인식하였다.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의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도는 4점 만점에 2.80~3.14점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는 2.34~2.94점으로 세부사업별로 별로 달성하지 못했거나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은 별로 달성하지 못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정책효과는 2.80~2.97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었으며, 큰 차이는 없으나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2.98점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전문직의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다.

사업별 필요도를 살펴보면,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3.14점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교육전문직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18점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육전문직의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2.80점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교육전문직의 필요도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2.95점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전문직의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교사가 가장 낮았다.

세부사업별 계획 대비 달성도는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37점으로 별로 달성하지 못한 편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육전문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36점으로 별로 달성하지 못한 편에 가까웠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전문직의 평가가 낮았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34점으로 별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였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94점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대상별 차이는 없었다.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72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전문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1〉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 평가

단위: 점

과제	유치원비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 도입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유치원 운영 위원회 운영	유치원 평가지속 발전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연차 보고서 발간	전체
필요도						
교육전문직	3.46 ^a	3.60 ^a	3.29 ^a	3.46 ^a	3.18 ^a	3.40 ^a
원장	2.89 ^d	2.96 ^c	2.55 ^c	3.00 ^c	2.94 ^c	2.87 ^d
교사	3.13 ^c	3.14 ^b	2.75 ^b	2.78 ^b	2.95 ^c	2.95 ^c
학부모	3.24 ^b	3.33 ^c	2.96 ^c	3.18 ^c	3.05 ^b	3.15 ^b
계	3.14	3.18	2.80	2.95	2.98	3.01
<i>F</i>	46.95***	56.08***	63.61***	102.60***	11.574***	80.78***
계획 달성도						
교육전문직	2.15	2.20	2.26	2.99	2.95	2.51
원장	2.43	2.41	2.36	2.93	2.66	2.56
계	2.37	2.36	2.34	2.94	2.72	2.55
<i>t</i>	17.26***	8.11**	2.03	0.78	22.35***	1.04
정책 효과						
교육전문직	비해당	2.58 ^c	2.56 ^b	2.97 ^a	2.83 ^b	2.73 ^b
원장		2.80 ^b	2.53 ^b	2.97 ^a	2.88 ^{ab}	2.79 ^b
교사		3.08 ^a	2.84 ^a	2.79 ^b	3.01 ^a	2.93 ^a
학부모		2.85 ^b	2.92 ^a	2.96 ^a	2.95 ^{ab}	2.92 ^a
계		2.95	2.80	2.87	2.97	2.90
<i>F</i>		22.36***	21.07***	12.02***	4.27**	6.75***

주: a, b, c 집단간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의 세부 사업별 정책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의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2.95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교사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80점으로 효과가 있는 편에 좀 더 가까

왔고, 학부모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의 정책효과는 전체 2.87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육전문직과 원장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97점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 전체의 필요도는 3.19점, 계획 대비 달성도는 2.61점, 정책효과는 2.93점으로 필요도에 비해 달성도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필요성 인식에 있어, 학부모의 인식이 가장 높고, 원장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에 있어서는 대상별 차이가 없었으며,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교사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전문직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의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도는 4점 만점에 2.70~3.44점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는 2.10~3.01점으로 세부사업별로 별로 달성하지 못했거나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은 별로 달성하지 못한 편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는 2.66~3.12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사업별 필요도를 살펴보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23점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교육전문직과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높았던 반면 원장과 교사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의 필요도에 있어서는 전체 3.44점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으며, 교육전문직과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42점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으며,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다. '지역단위 공·사립 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14점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전문직과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2.79점으로 필요한 편에 좀 더 가까웠으며,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교육전문직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 계획 대비 달성도를 살펴보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의 계획 대

비 달성도는 전체 2.69점으로 보통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3.01점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응답이었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86점으로 어느 정도 달성된 편에 가까웠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지역단위 공·사립 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41점으로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10점으로 별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으며, 원장이 교육전문직보다 달성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표 12〉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평가

단위: 점

과제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심화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단위 공사립 유치원 협력체제 구축	교사 도우미 로봇 첨단과학기술 활용	전체
필요도	교육전문직	3.40 ^a	3.53 ^a	3.39 ^b	3.21 ^a	2.49 ^c	3.20 ^b
	원장	3.19 ^b	3.41 ^b	3.33 ^b	3.05 ^b	2.68 ^b	3.13 ^c
	교사	3.17 ^b	3.42 ^b	3.40 ^b	3.09 ^b	2.63 ^b	3.14 ^{ab}
	학부모	3.35 ^a	3.47 ^a	3.52 ^a	3.26 ^a	2.88 ^a	3.30 ^a
	계	3.23	3.44	3.42	3.14	2.70	3.19
	<i>F</i>	25.34***	3.72*	13.17***	17.69***	21.41***	26.99***
계획 달성도	교육전문직	2.62	3.03	2.79	2.48	2.27	2.64
	원장	2.71	3.01	2.88	2.39	2.06	2.61
	계	2.69	3.01	2.86	2.41	2.10	2.61
	<i>t</i>	2.30	0.23	2.22	1.50	8.54**	0.40
정책 효과	교육전문직	2.78 ^b	3.11 ^{ab}	2.93 ^b	2.57 ^b	2.22 ^d	2.72 ^c
	원장	2.94 ^a	3.20 ^a	3.09 ^a	2.63 ^b	2.46 ^c	2.87 ^b
	교사	3.06 ^a	3.15 ^a	3.15 ^a	2.83 ^a	2.65 ^b	2.97 ^a
	학부모	2.93 ^a	3.02 ^b	2.91 ^b	2.84 ^a	2.84 ^a	2.91 ^{ab}
	계	2.99	3.12	3.06	2.79	2.66	2.93
	<i>F</i>	8.52***	8.22***	20.03***	9.30***	18.77***	8.09***

주: a, b, c, d 집단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의 세부 사업별 정책 효과를 살펴본 결과,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99점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전문직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의 정책효과

에 대해서는 전체 3.12점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장과 교사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정책효과는 전체 3.06점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원장과 교사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단위 공·사립 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79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66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육전문직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다.

라. 우수 교원 배치·활용

우수교원 배치·활용 분야에 대한 필요도, 계획달성도, 정책효과에 대해 각 대상별로 질문하였다. '유치원 교원 양성 임용제도 개선'과 '공립원장 평가·공모제 도입'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달성도와 정책효과는 질문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도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우수교원 배치·활용 분야 전체의 필요도는 3.25점, 계획 대비 달성도는 2.60점, 정책효과는 2.97점으로 필요도에 비해 달성도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필요성 인식에 있어, 교육전문직의 인식이 가장 높고, 원장과 교사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에 있어서는 대상별 차이가 없었으며,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교육전문직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수교원 배치·활용 분야의 세부 사업에 대한 필요도는 4점 만점에 3.03~3.38점으로 모두 3점 이상의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제고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는 2.40~2.75점으로 보통에서 어느 정도 달성한 편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전문성 제고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의 달성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정책효과는 2.89~3.06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었으며, '전문성 제고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사업별 필요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원 양성 임용제도 개선'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37점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원전문직의 필요성 인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전문성 제고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38점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육전문직의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다. '교원 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03점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였으며, 교육전문직과 학부모의 인식이 가장 높고 평가 대상인 교사의 필요성 인식

이 가장 낮았다. ‘우수 교사 발굴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29점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였으며,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사의 인식이 낮았다. ‘공립원장 평가·공모제 도입’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3.16점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가 대상자인 원장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3〉 우수 교원 배치·활용 분야 평가

단위: 점

과제		유치원 교원양성 임용제도 개선	전문성 제고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	교원능력 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우수교사 발굴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공립원장 평가 공모제 도입	전체
필요도	교육전문직	3.52 ^a	3.60 ^a	3.25 ^a	3.31 ^{ab}	3.18 ^a	3.37 ^a
	원장	3.31 ^b	3.40 ^b	3.08 ^b	3.32 ^{ab}	2.98 ^b	3.22 ^c
	교사	3.40 ^b	3.37 ^b	2.91 ^c	3.23 ^b	3.17 ^a	3.22 ^c
	학부모	3.33 ^b	3.34 ^b	3.21 ^a	3.38 ^a	3.25 ^a	3.30 ^b
	계	3.37	3.38	3.03	3.29	3.16	3.25
	<i>F</i>	7.471***	8.76***	45.05***	11.68**	14.31***	10.52***
계획 달성도	교육전문직		2.72	2.19	2.65		2.52
	원장	비해당	2.75	2.46	2.64	비해당	2.62
	계		2.75	2.40	2.64		2.60
	<i>t</i>		0.30	14.93***	0.00		3.56
정책 효과	교육전문직		2.88 ^b	2.49 ^b	2.93 ^{ab}		2.77 ^b
	원장		3.07 ^a	2.83 ^a	3.03 ^a		2.98 ^a
	교사	비해당	3.10 ^a	2.90 ^a	3.00 ^a	비해당	3.00 ^a
	학부모		3.02 ^a	2.96 ^a	2.84 ^b		2.94 ^a
	계		3.06	2.89	2.96		2.97
	<i>F</i>		4.09**	10.49**	6.78***		4.29**

주: a, b, c 집단간 차이가 있음.

p < .01, *p < .001

세부 사업별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문성 제고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75점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었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40점으로 보통 정도로 평가했으며, 교육전문직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수 교사 발굴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64점으로 보통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우수 교원 배치·활용 분야의 세부 사업별 정책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문성 제고 및

층형 연수·장학 지원'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3.06점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육전문직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89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육전문직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우수 교사 발굴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96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원장과 교사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부모의 평가가 낮았다.

마.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분야에 대한 필요도, 계획달성도, 정책효과에 대해 각 대상별로 질문하였다.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달성도와 정책효과는 물어보지 않고, 사업의 필요도에 대해서만 질문하였으며,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진행은 되고 있으나 시행되지는 않은 과제로 정책효과는 질문하지 않았다.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분야 전체의 필요도는 3.38점, 계획 대비 달성도는 2.44점, 정책효과는 2.92점으로 필요도에 비해 달성도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필요성 인식에 있어 교육전문직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에 있어서는 원장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교사의 인식이 가장 높았고, 교육전문직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분야의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도는 4점 만점에 3.25~3.46점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는 2.33~2.51점으로 세부사업별로 별로 달성하지 못했거나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가 가장 점수가 낮았다. 정책효과는 2.88~2.97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었으며,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38점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대상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교육전문직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별 필요도를 살펴보면,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25점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34점으로 필요하다고 평

가하였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의 필요도는 전체 3.46점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3.45점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낮았다.

세부 사업별 계획 대비 달성도는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45점으로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교육전문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48점으로 보통 정도로 평가하였고, 교육전문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전체 2.3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교육전문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의 계획달성도는 전체 2.51점으로 보통 정도로 응답하였으며, 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분야의 세부 사업별 정책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97점으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사의 평가점수는 가장 높았던 반면 교육전문직의 평가는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의 정책효과는 전체 2.97점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평가점수는 가장 높았던 반면 교육전문직의 평가는 가장 낮았다.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2.88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사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육전문직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표 14〉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분야 평가

단위: 점

과제	유아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지방자치 단체 투자 확대협력 연계 강화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	전체
교육전문직	3.26	3.41	3.52 ^a	3.50	3.55 ^a	3.45 ^a
원장	3.19	3.30	3.41 ^b	3.45	3.47 ^a	3.36 ^b
필요도 교사	3.25	3.35	3.38 ^b	3.46	3.49 ^a	3.39 ^{ab}
학부모	3.26	3.32	3.37 ^b	3.46	3.33 ^b	3.35 ^b
계	3.25	3.34	3.38	3.46	3.45	3.38
<i>F</i>	1.65	1.92	3.48 ^c	0.33	18.85 ^{***}	2.54

(표 14 계속)

과제		유아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지방자치단 체 투자 확대협력 연계강화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유아교육 바로알기홍 보강화	전체
계획 달성도	교육전문직	2.24	2.36	2.28		2.50	2.35
	원장	2.51	2.52	2.35	비해당	2.51	2.47
	계	2.45	2.48	2.33		2.51	2.44
	<i>t</i>	16.56**	6.31*	1.23	-	0.00	5.47*
정책 효과	교육전문직		2.61 ^c	2.50 ^c		2.67 ^c	2.60 ^c
	원장		2.84 ^b	2.75 ^b		2.84 ^b	2.81 ^b
	교사	비해당	3.10 ^a	3.06 ^a	비해당	2.98 ^a	3.05 ^a
	학부모		2.85 ^b	2.73 ^b		2.74 ^b	2.77 ^b
	계		2.97	2.90		2.88	2.92
	<i>F</i>	-	27.08**	36.11***	-	17.12***	31.73***

주: a, b, c 집단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01$

선진화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필요도에 있어서는 3.01~3.40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가 3.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가 3.01로 가장 낮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에 있어서는 2.44~2.61점으로 필요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점수가 낮았다. 가장 달성도가 높은 분야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이다.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2.90~2.97점으로 편차가 적었으며, 필요도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달성도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는 우수교원 배치 및 활용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이다.

〈표 15〉 선진화 추진계획 세부 사업별 평가

단위: 점

구분		1	2	3	4	5	전체
유아학비 부담 경감	필요도	3.46	3.22	2.98	3.66	3.66	3.40
	달성도	2.58	비해당	비해당	2.97	2.14	2.56
	효과	2.87	비해당	비해당	3.14	2.68	2.90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필요도	3.14	3.18	2.80	2.95	2.98	3.01
	달성도	2.37	2.36	2.34	2.94	2.72	2.55
	효과	비해당	2.95	2.80	2.87	2.97	2.90

(표 15 계속)

구분		1	2	3	4	5	전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필요도	3.23	3.44	3.42	3.14	2.70	3.19
	달성도	2.69	3.01	2.86	2.41	2.10	2.61
	효과	2.99	3.12	3.06	2.79	2.66	2.93
우수 교원 배치·활용	필요도	3.37	3.38	3.03	3.29	3.16	3.25
	달성도	비해당	2.75	2.40	2.64	비해당	2.60
	효과	비해당	3.06	2.89	2.96	비해당	2.97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	필요도	3.25	3.34	3.38	3.46	3.45	3.38
	달성도	2.45	2.48	2.33	비해당	2.51	2.44
	효과	비해당	2.97	2.90	비해당	2.88	2.92

주: 1, 2, 3, 4, 5는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순서대로 나타냄.

* $p < .05$, *** $p < .001$

세부 과제별로 살펴보면, 필요도는 2.70~3.66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도가 높은 과제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유아무상 교육 단계적 확대’와 ‘유아대상 영어학원 탈법단속 제도 개선’이며, 가장 필요도가 낮은 과제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의 ‘교사 도우미 로봇 첨단과학기술 활용’이다. 계획 대비 달성도는 2.10~3.01로 나타났다. 계획 대비 달성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의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이고, 가장 낮은 과제는 같은 분야의 ‘교사도우미 로봇 첨단과학기술 활용’이다. 정책효과는 2.66~3.1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효과가 있는 과제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유아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이고, 가장 효과가 낮은 과제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의 ‘교사 도우미 로봇 첨단과학기술 활용’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의 ‘교사 도우미 로봇 첨단과학기술 활용’ 과제는 필요도, 달성도, 정책효과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IV. 결론 및 정책제언

국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재정이 증가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된 관심과 재정만큼 유아교육정책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적합성 평가를 계획의 충실성, 추진체계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 선진화정책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명료한 편이며, 추진계획 내용이 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선진화정책 방향이 올바른 것으로 평가된 반면 선진화정책전달과정은 체계적이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하위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가지 분야 중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고, 우수교원 배치 및 활용 분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진화 추진정책을 통해 3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질문한 결과, 3가지 목표 중에서는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목표는 정책이 달성하고자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윤건호, 2003)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목표는 정책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되며,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조건(김신복·김명한·김종철·백현기·윤희원, 1996; 윤건호, 2003에서 재인용)이 되므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정책실행자들에게 명료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목표와 내용은 명료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전달 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목표의 실현 과정인 정책 실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을 분야별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필요도에 있어서는 3.01~3.40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가 가장 높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가 가장 낮았다. 계획 대비 달성도에 있어서는 2.44~2.61점으로 필요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점수가 낮았다. 가장 달성도가 높은 분야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이다.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2.90~2.97점으로 편차가 적었으며, 필요도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달성도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는 우수교원 배치 및 활용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학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아학비지원정책은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유아 취원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본 연구의 결과 유아무상교육의 확대는 선진화 추진 계획 중에서도 필요도와 정책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유아학비지원 대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물가를 반영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적용에 따라 만 5세

무상교육이 모든 만 5세아 대상으로 확대가 될 것이며, 2013년에는 만 3, 4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에 포함이 될 예정이다. 그런데,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2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지원 금액에 대한 산정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단가라는 것이 현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무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지원 금액⁴⁾이 학부모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금액을 2016년까지 조금씩 증액하여 2016년에는 유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도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만 3, 4세아 지원 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재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금액 재산정의 과정에서 정부가 무상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교원인건비, 시설설치비, 운영관리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에 대한 간접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정부의 학비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전달 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정책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명료한 편이며, 추진계획 내용이 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선진화정책 방향이 올바른 것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전달 과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마련한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여 정책목적에 맞도록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한다.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책전달 과정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이다. 유아교육의 정책전달은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명확한 전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책전달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평가는 2009년 발표된 방대한 유아교육정책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나온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 이전에 각각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각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한 범위와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수립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시범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그 방향을 수정하거나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4) 2010년 유치원비 현황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313,000원임.(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년 유치원비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로 개선이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선진화정책의 세부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의 예산은 부족한 편이지만,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에 대한 필요도는 모든 분야에서 3점이 넘게 나타나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선진화정책들의 일부 과제들은 정책의 실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도에 비해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달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의 모든 세부사업들이 같은 비중으로 동시에 시행될 필요는 없다. 실제로 2011년 현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으며, 방향을 바꾸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사업도 있다. 선진화정책 세부과제에 대한 인식도 과제에 따라 필요도와 달성도, 정책효과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실행하되, 필요도와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은 보다 확대하고, 필요성과 정책효과가 낮은 사업들은 축소하거나 실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필요도가 가장 높은 세부과제는 ‘유아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와 ‘유아대상 영어 학원 탈법단속 제도 개선’이고, 가장 달성도가 높은 과제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이며, 정책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유아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이다. 반면 ‘교사도우미 로봇 첨단과학기술 활용’은 필요도, 계획 대비 달성도, 정책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조성사업의 예산 중 38% 이상을 로봇과 관련한 R-Learning에 사용하고 있고⁵⁾, 상당한 보급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홍보성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의 측면에서 향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009년 12월에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유아교육정책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유아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의 세부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필요성에 비해 만족도와 정책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필요성과 성과가 높은 사업이 있는 반면 필요성과 성과 모두 낮은 사업도 있

5) 2009년 43억 2천만원 중 14억, 2010년 25억 중 11억 4천만원, 2011년 26억 중 10억 지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유아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각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기초로 향후 지속·확대해야 할 사업, 축소해야 할 사업, 중단해야 할 사업, 방향을 바꾸어 가야 할 사업을 구별해 내고, 정책수요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유아교육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옥(2004).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 12. 8).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 마련: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 선정·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 역(2008). OECD 영유아 교육·보육정책Ⅱ.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2006). Starting Strong Ⅱ.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교육통계 DB.
- 김신복·김명환·김종철·백현기·윤형원(1996). 교육정책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나정(2009). 저소득층가정 유아교육기회 지원정책 검토.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75-296.
- 민병제(2002). 교육정책 종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찬옥·조형숙·엄은나(2008). 한국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2(1), 5-29.
- 안선회(2009).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연구: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수(2008).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평가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이경숙·최진(2008).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실태와 효과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윤건호(2003). 유아교육정책 평가연구: 직무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4(1), 5-24.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2003). 정책학원론. 대구: 대명출판사.
- Dantnow, A., Borman, G., Stringfield, S., Overman, L., & Castellano, M.(2003). Comprehensive school reform in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ontext:

- Implementation and outcomes from a four-year study.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5(2), 143-170.
- Henry, G. T., Gordon, C. S., & Rickman, D. K.(2006). Early Education Policy Alternatives: Comparing Quality and Outcomes of Head Start and State Prekindergarten.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8(1), 77-99.
- Hong, G. & Raudenbush, S. W.(2005). Effects of Kindergarten Retention Policy on Children's Cognitive Growth in Reading and Mathematic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7(3), 205-224.
- Hassel, B. (2002). Making good choice: A guide for school and district. NCREL
- May, H. & Supovitz, J. (2006). Capturing the cumulative effects of school reform: An 11-year study of the impacts of the America's Choice on student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8(3), 231-257.
- Early Head Start Research and Evaluation Project(EHSRE).
http://www.acf.hhs.gov/programs/opre/ehs/ehs_resrch/ehs_overview.html#design

- 논문접수 2012년 3월 31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18일
- 교신처자: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메일 eyny@kicce.re.kr

Abstract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dvancement Policies

Eunyoung Kim Eun-Young Choi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accomplishment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dvancement policies implemented starting from December 2009, and further to suggest improvements of the policies. The study conducted online questionnaires, distributing to 147 expert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520 directors, 1,812 teachers, and 936 parents of kindergartens across the nation. The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of the achievement and appropriatenes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dvancement policies.

It was found that respondents evaluated the advanc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as effective. Specifically, the most demanding areas for the future improvement were 'the gradual expansion of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regulated English institute lawlessness for young children'. Also, the most achieved tasks were found to be 'the substantiality of the full-time operation in kindergarten' in relation to the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Based on these findings, further elabo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was suggested.

Key words: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early childhood education advancement policy